플랫폼 시대의 법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

2025. **6. 17.**(화) 14:00 ~

FKI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

주 최 사단법인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Korea Data Law and Policy Society

후 원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Center for Technology Law and Policy, Korea University

K-internet 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Program

■ 주요 내용 및 진행 순서

구분	시간	내용	
개회	14:00~ 14:10	개회사	이성엽 교수 (고려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
		축사	국회의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정무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이정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박정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환영사	박성호 회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기념 촬영 및 장내 정리 (5분)			
주제발표	14:15~ 15:45	발제1	**플랫폼자본주의 등장에 따른 법정책적 대응** - 조영기 사무총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발제2	**한국의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및 평가** - 김현수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제3	**자국 플랫폼의 가치평가 - 플랫폼 규제 및 정책적 시사점** - 황용석 교수 (건국대)
		발제4	**전자상거래 플랫폼 가치사슬 분석 및 생태계 활성화 저해요인 연구** - 유병준 교수 (서울대)
휴식(15분)			
종합토론 (라운드테이블)	16:00~ 17:30	좌장	이성엽 교수 (고려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
		토론	정혜련 교수 (경찰대) 강준모 CECG부대표 (법무법인 광장) 박유리 선임연구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건영 디지털플랫폼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혜선 이용자정책총괄과장 (방송통신위원회)
정리 및 폐회			

Contents

발제1 **플랫폼자본주의 등장에 따른 법정책적 대응** 1

조영기 사무총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발제2 **한국의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및 평가** 13

김현수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제3 **자국 플랫폼의 가치평가 – 플랫폼 규제 및 정책적 시사점** 25

황용석 교수 (건국대학교)

발제4 **전자상거래 플랫폼 가치사슬 분석 및 생태계 활성화 저해요인 연구** 41

유병준 교수 (서울대학교)

Contents

토론

정혜련 교수 (경찰대학) ····· 51

강준모 CECG부대표 (법무법인 광장) ····· 56

박유리 선임연구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58

정건영 디지털플랫폼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61

전혜선 이용자정책총괄과장 (방송통신위원회) ····· 62

개 회 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이성엽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플랫폼 시대의 법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 아래 모였습니다. 이 자리는 발표와 학술 교류를 넘어 디지털 경제의 핵심 현안을 법·제도로 함께 풀어가는 뜻깊은 장입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정책이 재정비되는 이 순간은 플랫폼 법·제도 논의의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최근 개정판으로 출간된 『플랫폼의 법과 정책』은 플랫폼을 둘러싼 다양한 의제를 법·제도로 어떻게 풀지 심도 있게 다룬 저서입니다. 오늘 우리의 발표와 토론도 그 고민의 연장입니다.

플랫폼이 사회·경제·법률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며, 균형 있는 규제, 혁신의 장벽 해소, 이용자 보호, 데이터 거버넌스 등 다양한 쟁점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오늘 세션에서는 실증 분석과 정책 제안을 담은 발제가 준비되어 있으며, 이어질 전문가 토론에서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발표자이신 조영기 사무총장님, 김현수 실장님, 황용석 교수님, 유병준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토론에 참여해 주실 정혜련 교수님, 강준모 박사님, 박유리 박사님, 정건영 팀장님, 전혜선 과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번 세미나가 학계와 산업, 정책 현장을 잇는 튼튼한 교량이 되어 플랫폼 시대의 과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활발한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세미나 준비와 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고려대학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 교수 **이 성 엽**

축 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천안(병) 국회의원 이정문입니다.

〈플랫폼 시대의 법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를 통해 플랫폼 산업의 법적·정책적 아젠다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플랫폼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질서를 형성하는 하나의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플랫폼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과 불균형 역시 함께 증폭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질서 훼손, 소비자 권익 침해, 노동의 사각지대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별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법적 대응과 제도 설계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합리적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 마련입니다. 플랫폼이라는 신산업의 성장은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마땅한 책임과 투명성의 원칙을 정립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가 바로 그 균형점을 고민하는 자리로서, 플랫폼 산업의 생태계가 상생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그간 플랫폼을 포함한 디지털 경제 분야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시장의 혁신은 지지하되 그 이면의 부작용은 철저히 점검하고 바로잡는 법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플랫폼의 법과 정책』제2판 발간과 세미나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사회의 합리적 규제모델을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국회의원 **이 정 문**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이정헌 의원입니다.

〈플랫폼 시대의 법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를 공동으로 준비해주신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성엽 회장님,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플랫폼은 산업 구조를 뛰어넘어, 우리의 일상과 사회 전반의 질서를 형성하는 기반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법과 제도는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생태계 속에서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가 마련해야 할 법적·정책적 대응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플랫폼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와 이에 대한 입법적 대응, 국내 플랫폼 가치의 재조명,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생태계 분석 등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될 예정인 만큼, 오늘 세미나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께서 제시해 주실 통찰과 해법이 향후 과방위의 입법·정책 활동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 역시 과학기술과 플랫폼 혁신이 조화를 이루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입법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세미나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플랫폼 규범과 법제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공론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이 정 헌**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박정훈 의원입니다.

〈플랫폼 시대의 법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성엽 회장님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님, 그리고 행사에 준비를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플랫폼은 이제 기술의 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질서와 삶의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플랫폼의 질서를 정립하는 법과 제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플랫폼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플랫폼 산업은 급격한 기술 진화와 함께 이용자 보호, 시장 지배력, 공정경쟁, 사회적 책임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지만 법과 제도가 그에 걸맞지 않으면 플랫폼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영기 사무총장님께서 발표하시는 「플랫폼자본주의 등장에 따른 법정책적 대응」은 구조적 문제를 실질적인 정책 과제로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학계, 산업계,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 플랫폼 운영을 위한 법과 제도의 바람직한 역할과 방향을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소중한 의견을 잘 참고해 국회 과방위의 입법과 정책 활동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박 정 훈**

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박성호입니다.

오늘 세미나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공동으로 준비해주신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발제와 토론에 함께해주시는 모든 전문가 여러분께도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플랫폼 산업은 더 이상 특정 분야에 국한된 산업이 아닙니다. 사회 전반의 구조를 바꾸고, 디지털 경제의 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변화는 산업, 경제,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법과 제도는 여전히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변화의 속도에 맞는 제도적 대응이 어렵고, 산업 주체들에게는 향후 변화 방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 경제를 성장 전략의 중심에 두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동안 플랫폼 산업은 규제와 진흥 사이에서 방황해 왔습니다. 매년 수백 건에 달하는 입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많은 경우 사안 중심적 규제에 머무르며 산업 전반의 구조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그런 점에서 매우 시의적입니다. 플랫폼 시대의 법과 정책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공정성과 혁신, 주권과 개방성 사이의 균형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논의가 그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 세미나가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정책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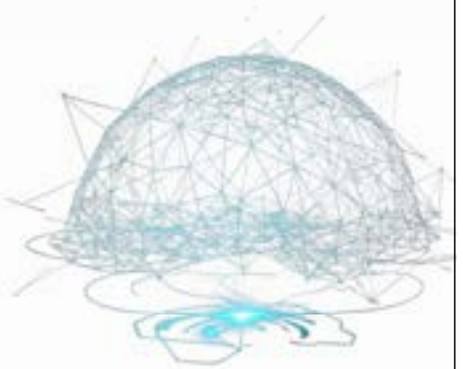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박 성 호**

I

플랫폼자본주의 등장에 따른 법정책적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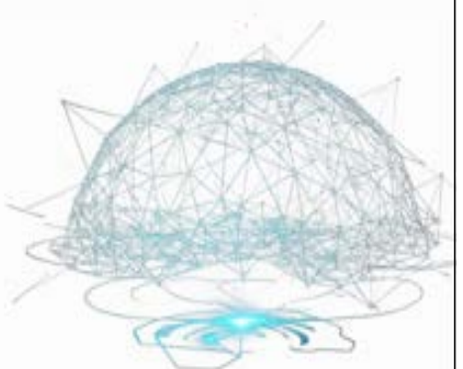
조영기 사무총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플랫폼 자본주의 등장에 따른 법정책적 대응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조영기

플랫폼 자본주의 등장에 따른 법정책적 대응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조영기

목 차

1. 플랫폼이란?
2.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개념
3. 주요국 플랫폼 전략 비교
4. 플랫폼 법규제의 다양한시각
5. 자국 플랫폼의 가치
6. 자국 플랫폼 정책의 방향

플랫폼의 개념

사회학적 정의

다수의 상호작용을 관리, 데이터화,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는 디지털 인프라

경영학적 정의

개인·조직·자원 간 상호작용 생태계, 혁신과 교환을 촉진하는 사업모델

법적 정의

"서로 다른 집단의 이용자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전자적 시스템" 등, 국가별로 상이

개인, 조직 차원의 거래 그 중에서도 디지털 온라인에서 거래, 상호작용이 이뤄지며
예전에는 이커머스, 이후에는 마켓플레이스와 같은 이름으로도 불렸으나
현재는 생산자와 이용자를 비롯 거래 대상이 모여 거간이 이뤄지는 형태를 플랫폼이라 명명.
각 산업별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분야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보편화됨

플랫폼 비즈니스 선순환 구조

디지털 산업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형성

서비스 고도화

파운데이션 API 활용으로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 개발

생산성 효율 증대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효율성 향상

수익화 실현

이용자 편익 증대로 자연스러운 수익 창출 구조 형성

이용자 피드백

실시간 사용자 의견 수렴을 통한 지속적 개선

AI 가 전세계 산업에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활용하여 각 분야 특성에 맞게
기존 디지털 서비스를 고도화 해야 하는데 지금은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높음

AI 비즈니스 선순환 구조

AI 산업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형성

AI서비스 고도화

파운데이션 AI모델
분야별 AI접목 개선된 서비스 제공

생산성 효율 증대

AI도입에 따라 개선된 플랫폼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효율성 향상

수익화 실현

이용자 편익 증대로 유료화, 구독 등
자연스러운 수익 창출 구조 형성

이용자 피드백

AI 활용에 따라 실시간 이용자 피드백 이뤄짐
이용자 맞춤형 AI서비스 진화 및 개선 반영

AI를 국가전략자산으로 보는 시각 하에 미국, 중국, 그리고 EU 일부 국가에서
자국 내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및 기존 산업에 적용하려 노력 중
2025년 딥시크 충격 이후, 전세계가 규제 논의 중심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지원 중심으로 상황 변화

플랫폼의 특성과 사회적 영향

네트워크 효과

이용자 증가 → 가치 증가, 규모의 경제 실현

데이터 집중

경쟁력과 반경쟁적 특성 모두에 영향

긍정적 영향

가격 인하, 선택 다양화, 거래비용 절감, 혁신 촉진

부정적 영향

독과점, 불공정거래, 개인정보 침해, 사회적 불평등 심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개념

국가 개입(시장 규제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경제·사회에 전략적으로 개입

인프라 구축

데이터센터, 해저케이블 등 디지털 인프라 확보

데이터 주권

국가 핵심 전략자산으로 데이터 주권 확립

플랫폼은 국경을 초월한 상호작용을 통해 정치·경제·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인프라로 진화하며, 국가플랫폼 자본주의(SPC : State Platform Capitalism) 개념이 부상
→ 국제정치경제의 전략 자산으로 인식

주요국 전략 비교

- **플랫폼은 디지털 정보주권/정치 사회적 공론장/ 경제 사회적 인프라 기능을 지원**
  : 검색, 소셜미디어 등을 국민의 정보 접근과 표현의 자유 구현하기에 정치참여와 사회적 연대의 공간으로서 국가 공론장 차원의 디지털 주권 확보하기 위한 자산

구분	미국	중국	EU
특징	민관 파트너십, 글로벌 진출, 빅테크 보호, 플랫폼=안보	국가주도, 민관(군) 복합, 해외진출통제, 배타적 보호	규제 중심, 디지털 주권, 자국 플랫폼 육성 및 시장보호
전략	CLOUD Act, America's Frontier Fund AI 인프라(스타게이트)	디지털 실크로드, 만리방화벽, AI+ 행동(국가 중합적 지원강화)	DMA/DSA, EuroStack, 데이터 현지화

- EU DMA, DSA는 EU집행위의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유럽(A Europe Fit for the digital age)에 기반 : 경쟁촉진은 '외부', 역량강화는 '내부 ' 전략
- 중국의 미국 빅테크에 대한 철저한 차단과 자국 플랫폼 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정책은 산업정책을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국가전략자산 측면

주요국의 플랫폼 규제 전환

미국

'23년 자국 빅테크 보호 위한 '반독점 패키지 법안' 폐기

- **트럼프 대통령, AI 규제 전면 백지화 선언**
- **바이든의 빅테크 규제 정책 비판:** 기존 행정부의 플랫폼 규제가 혁신과 경쟁력 약화시킨다고 비판.
- **EU의 미국 기업 규제에 강력 대응 경고**

EU

과도한 규제로 성장이 멈췄다는 자성 확산 ('24.9월 보고서)

- **'경쟁력 나침반' 발표로 기업 규제 부담 타파 선언:** 유럽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부담 완화 및 혁신 장려 정책 제시.
- **EU 경제성장 저해 우려로 주요 빅테크 규제 법안 폐기 수순('25.2)**
- **'EuroStack' 정책으로 디지털 자립 추진:** 독자 디지털 인프라 및 기술 생태계 구축, 디지털 주권 확보 노력 강화.

중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서 점진적 완화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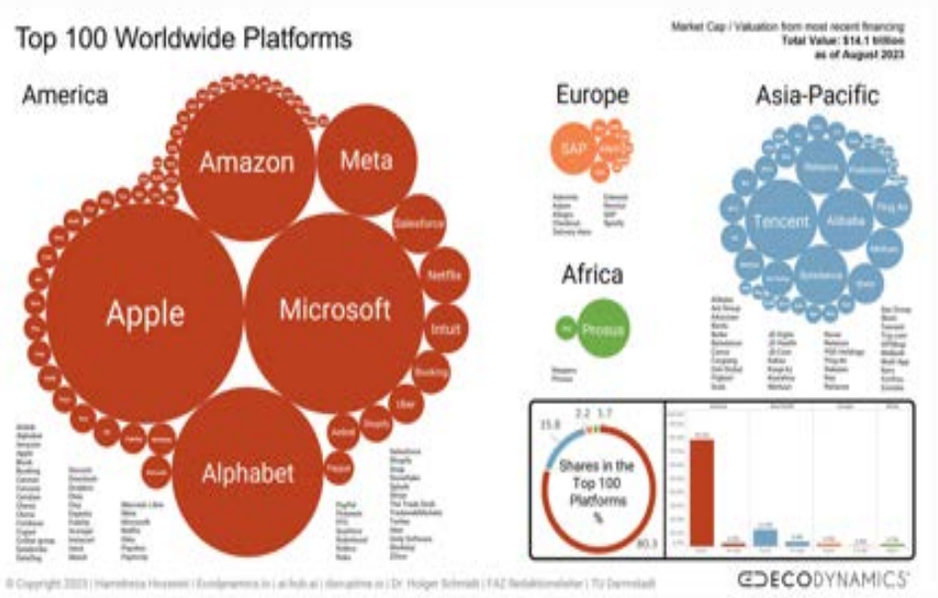
- **규제 위주의 성장 통제:** 과거 플랫폼 기업 독점 행위와 데이터 관리 부실에 대한 강력한 규제
- **경제 성장 둔화 및 기술 경쟁 심화:** 경기 둔화와 미국과의 기술 경쟁 심화로 자국 플랫폼 기업의 혁신 동력 확보 중요성 부각.
- **'건강한 발전' 강조:** 플랫폼 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해외 경쟁 우위 확보 위한 지원 정책으로 전환

규제 패러다임 변화 흐름

- **AI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 심화**
  : AI 기술이 미래 산업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며, 각국은 자국 AI 기업이 글로벌 시장 우위 점하도록 전폭 지원.
- **디지털 혁신과 경쟁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
  : 규제를 넘어, 자국 플랫폼 기업의 세계 시장 경쟁력 확보 및 혁신 촉진 방향으로 정책 선회.
- **플랫폼 규제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 필요**
  :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섣부른 규제는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 필요.

플랫폼 규제의 세 가지 시각
규제 필요론
독점·불공정거래 방지, 투명성·공정성 강화
혁신 저해론
과도한 규제가 성장·혁신 저해, 개방형 혁신 강조
국내기업 보호론
역차별 방지, 국내 플랫폼 경쟁력 유지
세 가지 시각을 고려하여 국가의 법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논의만 이어지고 있음
(산업 전분야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기존 산업 이해관계자와 갈등이 플랫폼을 매개로 분출되어 이를 포섭하려는 입법 시도 중)
→ 시각을 확장하여, 부작용, 변화된 국외 상황 등을 더욱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각

플랫폼 규제 → 스타트업 성장 저해 우려
이미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플랫폼법 도입 시도는 성장 가능성마저 차단할 수 있음
1243
글로벌 유니콘
전 세계 유니콘 기업 총수
15
한국 유니콘
한국 유니콘 기업 수(1.2%)
665
미국 유니콘
미국 유니콘 기업 수(1위)
1
글로벌 TOP
상위 100대 중 한국 기업 단 1개
중국의 사례를 보면, 2021년 반독점 규제 이후 CVC(기업형벤처캐피탈) 투자는 26.73% 감소했고, 신규 스타트업은 18.72% 급감



주요 국가들은 자국 플랫폼 기업을 성장 동력으로 간주, 규제보다는 보호와 육성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 한국은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만큼 규모가 작은 국내 플랫폼에까지 동일 수준의 규제 적용

플랫폼 규제 → AI 산업 발전 저해 우려

1. **알고리즘 공개의 부작용:** 맞춤형 추천 서비스 제한으로 소비자 편익 감소 및 콘텐츠 소비 왜곡
2. **계열사 콘텐츠 제한:** 음원 플랫폼이 자사 및 계열사 제작 콘텐츠를 추천할 수 없어 이용자 경험 저하
3. **검색 및 지도 서비스 제약:** AI 서비스에 자사 정보 활용 불가로 국내 AI 모델의 경쟁력 약화
4. **투자 및 혁신 위축:** AI 기술 활용 서비스의 수익화 어려움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 투자 축소 우려
5. **국제 경쟁력 약화:**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글로벌 AI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입지 약화 가능성

자국 플랫폼의 가치

경제적 가치
고용 창출, 세수 확대, 산업 생태계 발전

사회적 가치
디지털 포용, 정보 접근성, 공공서비스 연계

문화적 가치
언어·콘텐츠 현지화, 문화 정체성 보호

정책적 가치
국가 디지털 전략, 데이터 주권 실현

→ 자국 플랫폼은 자국 법률·경제·사회 환경에서 설립·운영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국가 주권, 경제 자립성, 사회문화 정체성 구현의 핵심 인프라임

자국 플랫폼 정책의 방향

인프라 강화
디지털 인프라·거버넌스 강화,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균형
글로벌 진출 종합 지원

혁신 생태계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산업정책과
규제정책의 조화

AI 연계
AI·플랫폼 연계 전략 강화, 장기적 경
쟁력 확보

규제 형평성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방지,
진흥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처벌 중심에서 자생적 틀 마련과 준수 유도)
민간 기술 X 정부 정책 기반의 상보구조 필요

자국 플랫폼(AI로 전환) 정책의 방향

구분	인프라	혁신 생태계	AI 연계
논의 사항	국가 AI 인프라(컴퓨팅센터 등) 확대 중소 및 스타트업 R&D 지원, 산업별 특화 AI 접목 솔루션 개발 지원 필요 AI 바우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를 글로벌로 확장할 때도 AI 기술 내재화, 투자유치, 현지 네트워크 활용, 현지화 전략이 필수인만큼 이에 대한 지원 인프라 구축 필요	온플법 등 제정 시 사업모델, 방식이 공정위 규제에 맞춰 표준화 → 혁신 저해 우려 스타트업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다지만, 스타트업이 성장하며 얻을 수 있는 과실에 대한 "꿈"을 꿀 수 없는 환경 조성(실제로 VC 투자 감소, 신규 비즈니스 감소, 국내 CVC 투자 감소 등이 나타남)	AI 강국이 되기 위한 국가대표 플레이어는? 플랫폼, 데이터, AI, 이용자와의 밀접성을 고려할 때, AI산업 발전을 위해 데이터 학습, 이용자들에게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시 현재 논의되는 플랫폼 규제들이 부담이 될 수 있음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및 수익화가 근본적으로 어려지고, 국내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가 축소될 것

→ 국내 플랫폼은 전세계에 거의 없는 자생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플랫폼에 초점을 맞춘 (문제 해법?) 법정책 마련 시도 전, 산업 경제적 측면의 새로운 규제 프레임을 구축할지 여부에 대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사회적 숙의가 필요**

감사합니다

Ⅱ

한국의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및 평가

김현수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의 플랫폼 규제 입법동향 및 평가

2025년 6월 17일(화)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장
김 현 수

KISD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의 플랫폼 규제
입법동향 및 평가

CONTENTS

1 검토 배경
2 플랫폼 3법 추진경과
3 지난 정부 정책방향
4 美 트럼프 정부 정책방향
5 해외 플랫폼 규제 입법동향
6 향후 정책방향

1 검토 배경

KISDI

- '20년말부터 '21년까지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여러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산업계 등의 반대가 거세 신중한 논의를 위해 보류

  ※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플랫폼 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등

- 지난 정부 출범 후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카카오 서비스 장애,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등이 발생하여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문제에 대한 엄정 대응 필요성 제기

  –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화법, 플랫폼 독과점규제법 등이 발의되고, 정부는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추진

- 민주당 대선공약에는 플랫폼법 제정, 이용자 보호 강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보완입법, 입점업체의 단체협상권, 배달수수료 상한제 등이 포함됨

- 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빅테크 플랫폼을 규제하고 있으나, 美 트럼프 정부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시 관세 부과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

3

2 플랫폼 3법 추진경과

KISDI

플랫폼 공정화법('21.1월 발의) 및 플랫폼 이용자보호법('20.12월 발의) 관련 과잉 규제, 중복 규제 문제 등이 제기되어 소관부처간 협의와 당·정·청 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수정의견 제출('21.11월)

- **(플랫폼 공정화법)** 이용사업자로부터 이용대가를 받고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하여 적용
  –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플랫폼만 적용
  – **플랫폼과 이용사업자 간 관계** 규율
-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이용자 간에 의사소통, 정보교환, 거래 등 **모든 유형**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플랫폼에 대하여 적용
  –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플랫폼만 적용, **대규모 플랫폼**은 **강한 규제** 적용
  – **플랫폼과 이용사업자 간 관계** 및 **플랫폼과 최종이용자 간 관계** 모두 규율
- **(수정안)** 공정화법 적용대상을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으로 원안 대비 10배 상향, 양법의 중복조항 조정

4

3 지난 정부 정책방향

KISDI

플랫폼 특유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정책 논의 및 상생발전 촉진 기구(자율기구) 출범 ('22.8월)

- **최소규제 원칙에 따라 분야별 대표사업자와 자율기구 내 협의를 통해 법 제정 없이 신속히 효력을 발휘하는 자율준칙 도출**
- **기존에 추진되던 플랫폼 공정화법(공정위) 및 플랫폼 이용자보호법(방통위)은 입법 추진 유보**
  - 향후 자율규제의 실효성 여부, 시장변화 및 경쟁상황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재추진 여부 검토
- **플랫폼에 특유하게 신설·적용되는 규제가 아닌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법에 의거한 규제는 그대로 적용**
- **자율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을 위해 법률적 근거 마련**
  - 전기통신사업법(자율기구 설립 및 지원 근거) 및 공정거래법(자율준수 법제화) 개정 추진
- **다양한 부처 소관의 플랫폼 정책방향을 통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운영**
  - 기재부(주관), 과기부, 방통위, 공정위, 중기부, 금융위, 개보위 등 관계부처들로 구성

5

3 지난 정부 정책방향

KISDI

카카오 서비스 장애 발생('22.10월) 후 정책기조의 변화

-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 ('23.1)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고,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예시

    ※ '22.1월 행정예고하였으나, 자율규제로의 정책방향 변화로 추진이 유보되고 있던 상황

-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 개정** ('24.5)
  -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혼합결합 중 일부를 일반심사로 전환해 엄밀히 심사, 무료서비스의 시장획정 방식, 경쟁제한성 판단 시 네트워크 효과 및 혼합결합의 끼워팔기/묶어팔기 가능성 고려 명시

6

3 지난 정부 정책방향

KISDI

공정위,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추진 (~'24.2월)

- **(경과) '23.6월경부터 추진하다 통상 갈등 우려 등으로 총선후 재논의하기로 결정**
  - 플랫폼 독과점 규율개선 TF 운영 ('23.1~6월)
  -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회의 ('23.6) 안건 추진 불발
  - 공정위,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추진 계획 보고 ('23.12)
  - 관계부처(방통위,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와 협의 (~'24.2)
  - 공정위, 지정제도 포함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함 ('24.2.7)
- **(주요내용) 사전 지정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4대 금지행위(자사 우대, 끼워팔기,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 규정**
  -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부과

7

3 지난 정부 정책방향

KISDI

공정위,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추진 ('24.9월~)

- **(배경) '24.7월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자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방향 발표('24.9월)**
  - 그간 정부는 플랫폼 시장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상생협약), 적극적 법 집행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응해왔으나,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경쟁제한 행위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일부 기업들의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입점업체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긴요하다고 설명
- **(공정거래법 개정) 지배적 플랫폼(중개, 검색, 동영상, SNS, OS, 광고) 사후 추정, 4대 경쟁제한 행위의 정당한 이유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부과, 임시 중지명령 제도 도입 등**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법 적용대상에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포함,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 관리 의무 기타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의무 부과**

8

3 지난 정부 정책방향

KISDI

제22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

구 분	주요 내용(공통사항)
플랫폼 공정화법 (8건)	• 중개거래계약서 기재사항 및 표준계약서 • 계약 변경·해지 등 사전통지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이용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 판매대금의 지급기한 및 판매대금의 보호
플랫폼 독점규제법 (4건)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 공시 의무(이용제한, 구입강제, 검색순위 표시기준, 정보 수집·제공 등)
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법 (5건)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 판매대금의 지급기한 및 판매대금의 보호 • 이용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3건)	• 지배적 사업자의 금지행위 (자사우대, 끼워팔기, 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4건)	• 판매대금의 지급기한 및 판매대금의 보호 •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관련 의무(표준계약서, 판촉비용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요구, 경영활동 간섭,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불이익 제공 등 금지)

9

3 지난 정부 정책방향

KISDI

공정거래법 위반 소송 동향

구 분	공정위 판단	서울고법 판결
자사 우대 (네이버)	•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입점업체 상품이 검색결과 상단에 노출되기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 변경(2010)	• 비교쇼핑서비스가 오픈마켓으로의 중요한 유입 경로이고 네이버가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자사 입점업체와 경쟁 오픈마켓의 입점업체를 차별하여 우대하는 경우 자사 입점업체와 자사 오픈마켓의 매출이 촉진될 수 있으며, 실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남(22.12)
자사 우대 (카카오 모빌리티)	•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우대(23.2)	•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는 동등한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없어 '차별'이 아님 • 해당 행위로 인해 택시 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25.5)
경쟁플랫폼 이용제한 (구글)	•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구글플레이 1면 노출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구글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하여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게 함(23.4)	• 소송 진행중

10

3 지난 정부 정책방향

KISDI

공정거래법 위반 소송 동향

구 분	공정위 판단	서울고법 판결
최혜 대우 (쿠팡)	• 쿠팡은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 • 이는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 (21.8)	• 위반기간(17~20)동안 쌍방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쿠팡의 사업능력이 납품업체들의 사업능력보다 더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쿠팡의 사업능력이 더 우월하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그 사업능력의 격차가 납품업체들을 착취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움 • 판매가격 인상요구 행위가 단순한 제안을 넘어 최소한의 강제성을 가진 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24.2)
끼워팔기 (구글)	•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판매하지 않음 • 동의의결 절차 개시 (25.5)	

11

[참고] 민주당 대선공약

KISDI

-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시장 규율 법제 구축
  -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시장 **공정화법** 도입
  -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및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법** 도입으로, 시장의 자정 기능을 강화/경쟁 촉진을 통해 다양한 산업의 혁신 재창출
  - 플랫폼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제도 재정비
-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축)**
  - 거대 플랫폼 기업의 **이용자 보호** 수준 제고
    - 허위조작정보 모니터링 및 이용자 신고 처리 제도 도입
    - 디지털 서비스 장애 시 조치, 정부 보고, 장애 원인 고지 등 의무화
    - 국가적 참사, 사회 재난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 명예 보호
  -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 입법**으로 앱마켓 글로벌 형평성 제고
    -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 부과 금지,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 책정 의무 등
  -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강화
- **(입점업체의 협상력 강화)**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로 합리적인 거래계약 유도
- **(모두가 행복한 배달문화 구축)**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방통위/공정위로 산재된 **자율규제 체계 정비**

12

4 美 트럼프 정부 정책방향

KISDI

규제 완화와 기업 자율성 강화를 통해 미국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추진
외국정부의 미국 기업 규제 차단

- **(경쟁 규제)** 바이든 정부의 적극적 반독점 정책에서 기업 친화적 방향으로 선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빅테크 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관계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작된 **빅테크 반독점 소송은 지속될 것**이나, 시정조치가 완화될 수 있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구글 등 빅테크의 분할에 대해 회의적
- **(콘텐츠 규제)** FTC 퍼거슨 위원장은 플랫폼의 콘텐츠 검열 정책을 비판하며 투명성을 요구한 반면, **아동 · 청소년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부모에게 통제권을 부여하는 입법의 필요성 강조
- **(대외 정책)** 외국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불균형한 규제**를 부과하는 경우 **관세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25.2)

13

4 美 트럼프 정부 정책방향

KISDI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

- **(구글)** '20년 법무부가 **검색서비스** 및 **검색텍스트 광고** 분야 배타적 계약에 대해 소송 제기, 1심에서 반독점법 위반 판결('24.8)
  - '23년 법무부가 **디지털 광고** 분야 경쟁사 인수 및 자사서비스 이용 강제에 대해 소송 제기
- **(애플)** '24년 법무부가 **스마트폰** 시장 독점 보호를 위한 경쟁사 앱 제공 제한, 타사 기기의 기능 제한 등에 대해 소송 제기
- **(아마존)** '23년 FTC가 최혜대우 요구, 자사서비스 이용 강제 등에 대해 소송 제기
- **(앱마켓)**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결제시스템 관련 소송 제기, 1심/2심에서 **유도 금지(anti-steering) 정책**을 캘리포니아주법 **위반**으로 판결, 연방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24.1)
  - 에픽게임즈가 **구글**의 **제3자 앱마켓 방해** 및 **결제시스템 강제**에 대해 소송 제기, 1심에서 법 위반 판결 및 조치 부과('24.10)

14

5 해외 플랫폼 규제 입법동향 : 유럽연합

KISDI

'22년 제정한 디지털시장법에 따라 '25.4월 애플 및 메타에 대해 최초의 법 위반 결정

- **(애플) 앱마켓의 유도금지 정책에 대해 5억 유로 과징금 부과**
  - 애플이 부과한 여러 제한 조치로 인해 앱 개발자들은 앱마켓 외부의 대체 유통 채널이 제공하는 이점을 완전히 누릴 수 없었고, 앱 개발자들이 이러한 대안적이고 저렴한 제안에 대해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그 혜택을 완전히 누릴 수 없었으며, 애플은 이러한 제한이 객관적으로 필요하고 비례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함
- **(메타) pay or consent 광고 모델에 대해 2억 유로 과징금 부과**
  -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와 동등하지만 개인정보를 덜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제공하지 않았고, 개인정보의 결합에 대해 자유롭게 동의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음

* 메타는 '24.11월 기존 광고 모델을 일부 수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

15

5 해외 플랫폼 규제 입법동향 : 유럽연합

KISDI

디지털시장법에 따라 조사 중인 사안

- **(애플) 기본설정 변경 및 선탑재 앱 삭제 제한 행위에 대해 조사 개시('24.3), 애플의 정책변경으로 조사 종료('25.4)**
- **(애플) 운영체제 상호운용성 관련 이행조치를 구체화하는 결정 발표('25.3)**
- **(애플) 사이드로딩 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 예비결정('25.4)**
  - 개발자가 대체 앱 유통채널을 이용하려면 핵심 기술 수수료 등 불리한 약관을 받아들여야 하므로 대체 유통채널 이용 유인이 감소하였고, 개발자의 대체 채널을 통한 앱 배포를 저해하는 지나치게 엄격한 적격 요건을 부과하였으며, 최종이용자가 대체 앱 유통 채널을 이용하여 앱을 설치하는 과정을 지나치게 부담스럽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음
- **(구글) 앱마켓의 유도금지 정책에 대해 법 위반 예비결정('25.3)**
- **(구글) 검색 관련 자사우대 행위에 대해 법 위반 예비결정('25.3)**
-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해 예비 조사 개시('24.3)**

16

5 해외 플랫폼 규제 입법동향 : 영국

KISDI

'24.5월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 제정 :
전략적 시장지위 기업을 지정하여 행동규칙 및 경쟁 촉진 조치 부과 & 소비자 보호 강화

- **(적용대상)** 영국내 매출액 10억 파운드 또는 전세계 매출액 250억 파운드 초과하는 디지털 기업으로서, **상당하고 견고한 시장영향력** 및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위** 보유한 기업
- **(행동규칙) 공정거래, 열린 선택, 신뢰 및 투명성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행동규칙 마련**
  - **(금지행위)** 특정 이용자에 대한 차별적 조건, 자사 우대, 끼워팔기, 서비스 이용 제한, 데이터 부당 이용, 다른 기업의 제품 이용 제한 등
  - **(준수사항)**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거래, 효과적인 불만처리절차, 정보 제공, 중대한 변경에 대한 사전 통지, 기본설정 등
- **(경쟁 촉진 개입) 시장지배력의 근본적 원인 해소를 목표로 하는 적극적 개입 가능**
  - 데이터 이동성, 상호운용성, 기업내 조직 분리 등
- **대상기업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구글의 검색 및 검색광고, OS, 앱마켓, 브라우저 등을 포함하는 애플과 구글의 모바일 생태계 조사 개시('25.1)**

17

5 해외 플랫폼 규제 입법동향 : 일본

KISDI

'24.6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 제정 :
규제대상 사업자를 지정하여 금지행위 및 준수사항 부과

- **(적용대상) 특정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정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는 자를 규제대상 사업자로 지정
  * 모바일 OS, 앱마켓, 브라우저, 검색엔진
  - 구글(4개 유형 전부), 애플(OS, 앱마켓, 브라우저) 및 iTunes(앱마켓 공동 공급) 지정('25.3)
- **(주요내용)** 자사우대, 인앱결제 강제, 유도 금지, 앱 개발자에 대한 불공정한 취급, 브라우저 엔진 강제, 사이드로딩, 기본설정, 상호운용성, 데이터 부당 이용, 데이터 이동성 등
- **(DMA와의 차이점) 적용대상 서비스가 더 적고,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더 고려***
  * 예: 사이드로딩은 제3자 앱마켓만 허용(DMA는 웹사이트를 통한 다운로드도 허용)

18

6 향후 정책방향

KISDI

자율규제 고도화, 핀셋 제도개선 & 정책 순환체계 구축 필요

- **(규제화된 자율규제)** 그간 자율규약, 상생협력 방안 등을 발표하였으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도출 및 **체계적 추진** 필요
  - 법적 규제보다 **자율규제가 적합한 분야**(투명성, 절차적 공정성, 분쟁해결 등)를 중심으로 **개별영역별 근거규정** 마련
- **(핀셋 제도개선)** **생태계 기반서비스**로서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이 필요한 경우(예: OS, 앱마켓) **시장지배력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개입**을 통해 공정경쟁 기반 조성
  - 소극적으로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특정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기술적·세부적 규제조치를 마련해가는 **'규제조정'** 필요
- **(정책 순환체계)** 플랫폼을 둘러싼 **기술/시장의 발전 및 경험적 근거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플랫폼 정책 수립** 필요
  - 플랫폼 경제의 현황과 향후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가치 및 부작용·위험** 등 전반적인 **생태계 건강성 진단**
  - 기존 **플랫폼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 폐기·수정 또는 신규 정책 제안

19

감사합니다

KISD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Ⅲ

자국 플랫폼의 가치평가 – 플랫폼 규제 및 정책적 시사점

황용석 교수
건국대학교

자국 플랫폼의 가치인식과 플랫폼 정책의 균형적 접근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prohys@gmail.com.)

자국 플랫폼

글로벌 플랫폼 독점화와 문제점

- **글로벌 플랫폼의 집중화가 범세계적으로 증가**
  -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이 방대한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기반 경쟁력으로 글로벌 시장의 집중이 가속화

- **자국 플랫폼의 취약화가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

영향 차원	주요 문제점	구체적 사례
국가 차원	경제성장 자율성 약화, 정책 결정권 종속	글로벌 기업 정책에 의존하는 국가 정책 결정
사회적 차원	공공 서비스 및 데이터 관리 효율성 저하	데이터 주권 약화, 국가 안보 위협
시민 차원	디지털 격차 심화, 정보 유통 왜곡	특정 플랫폼 알고리즘에 의한 정보 편향
경제 차원	공정한 경쟁 환경 확보 어려움	국내 기업의 경제적 기회 글로벌 기업 흡수

- **자국 플랫폼의 중요성**
  - 플랫폼은 단순한 기술적 도구가 아닌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 기술로서 국가의 디지털 주권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

자국 플랫폼의 개념과 의의

- **자국 플랫폼(National Platform):**
  - **특정 국가의 법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서 설립되고 운영되는 디지털 플랫폼**

- **자국 플랫폼의 특징**
  - **복합적 개념**
    - ✓ 단순한 지리적 위치나 법적 등록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국가 주권, 경제적 자립성, 사회문화적 정체성이 디지털 영역에서 구현되는 형태
  - **이해관계 반영**
    - ✓ 자국 내 경제 주체(정부, 기업,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며, 국가적 차원의 정책 및 규제에 직접적 영향을 받음
  - **디지털 주권 보장**
    - ✓ 데이터, 소프트웨어, 표준과 프로토콜, 프로세스, 하드웨어,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의 핵심 요소
  - **전략적 자산**
    - ✓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되며, 국가와 국민의 독립성과 안정성 유지에 필수적

  - **"데이터, 소프트웨어, 표준과 프로토콜, 프로세스, 하드웨어,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의 핵심 요소로서 자국 플랫폼의 중요성을 강조**

자국 기업 관련 법령

- 주요 법령별 자국 기업 정의

법령명	관련 조항	자국 기업 정의
상법	제 172조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이는 대한민국 내에서 설립된 회사를 의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사업자로 등록된 국내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을 자국 기업으로 정의

- 자국 플랫폼 vs 자국 기업
  - 자국 기업의 특징
    - ✓ 법적 관할권 내 설립 및 운영
    - ✓ 국가별 법률에 따른 등록 및 규제
    - ✓ 명확한 법적 정의 존재

- 자국 플랫폼의 확장된 개념
  - 디지털 환경에서 운영되는 기업 포함
  - 데이터 처리 위치, 의사결정 구조 중요 실질적 통제권이 핵심 요소

- **핵심 차이점:** 디지털 환경에서는 기업의 물리적 위치보다 데이터 처리 위치, 의사결정 구조, 실질적 통제권 등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

자국 플랫폼의 분류 체계

- 협의, 중위, 광의적 분류

기준	협의	중위	광의
설립과 소유권	자국에서 창업 및 성장	자국에서 법적 지위를 가짐	외국 소유지만 자국 경제에 기여
주요 활동 지역	자국 내 주요 활동	자국 내 주요 사업장	자국에서 서비스 및 운영
경제적 기여	자국 경제에 기여	자국 경제에 기여	자국 경제에 기여
사례	네이버, 카카오 등	쿠팡, 우아한형제들 등	우버코리아, 아마존코리아
관련 법령	「상법」,「외국인투자촉진법」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없음

- 각 분류별 장단점
  - 협의적 수준
    - ✓ 장점: 국적 명확, 법적 근거 충실
    - ✓ 단점: 글로벌 플랫폼 포함 불가
  - 중위적 수준
    - ✓ 장점: 법적·경제적 현실성 반영
    - ✓ 단점: 소유권과 통제권 외부 존재시 모호함
  - 광의적 수준
    - 장점: 경제적 기여 포함으로 포괄적 정의 가능
    - 단점: 법적 기준 부재로 경계 모호

자국 플랫폼 정의의 확장된 요건들

접근방법	주요 특성	설명
법제도 관점	• 법적 준거성 • 투명성 • 공공의 보호	플랫폼이 해당 국가의 법률 체계 내에서 설립되고 운영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플랫폼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
소유권 기반 관점	• 자국 소유권 • 경영 통제권 • 안정적 통제	플랫폼의 지분 구조와 경영 통제를 중심으로 자국 플랫폼 여부를 판단하며, 주된 소유권과 경영 통제권이 자국 내에서 행사
운영 범위 관점	• 주요 사업장 • 주요 사용자 • 현지화 서비스	플랫폼이 자국 내에서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된 사용자 기반이 자국민인 경우 자국 플랫폼으로 정의
경제적 기여 관점	• 고용 창출 • 세수 기여 • 산업 발전 기여	플랫폼이 국가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통해 자국성을 평가하며, 고용 창출, 세수 증대,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
문화-사회적 관점	• 문화적 정체성 • 사회적 규범 준수 • 글로벌 문화 확산	플랫폼이 자국의 문화적 요소와 사회적 규범을 디지털 환경에 반영하여 자국 문화와 정체성을 보호하고 확산
국가 정책 연계성 관점	• 정책 연계성 • 산업 고도화 • 공공 부문 협력	플랫폼이 정부의 디지털 전략과 산업 정책의 목표에 부합하여 운영되며, 데이터 주권 강화, 디지털 전환 촉진 등 정책적 목표를 실현

-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
  - 자국 플랫폼의 정의는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형성될 수 있고, 국가의 제도 및 정책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 개념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자국 플랫폼

- **기존 산업 정책과의 차이**
  - 플랫폼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생태계
  - **산업 정책**
    - ✓ 특정 산업군의 경쟁력 향상과 기술 발전 촉진 플랫폼 정책: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복합적 생태계 관리
    - ✓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각 필요

- **플랫폼의 역할 확장**
  - 제품과 서비스 유통 공간
  - 데이터 축적 및 활용
  - 소비자와 생산자 관계 조정
  - 정보 흐름과 데이터 주권 영향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자국 플랫폼

- 플랫폼 생태계의 다차원적 영향

차원	자국 플랫폼의 경쟁력 유지
경제적	• 국내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디지털 환경 제공 •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 상승 기대 • 지역, 소상공인, 농어촌 등에 대한 경제적 기회 확장
정치적	• 디지털 주권 유지의 기축 산업 • 국가의 정책적 자율성 보호와 정책 조응성 • 디지털 안전망과 국가 안보체계로 기능
사회적	• 다양한 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 국가 단위 디지털 소외 계층의 발굴 포함
문화적	• 지역 기반 콘텐츠 보호 및 발전 • 자국 문화 정체성 유지

- 정책적 시사점
  - 플랫폼은 핵심 인프라로서 공공성을 고려한 거버넌스 모델 적용이 필요하며, 사회적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적 개입이 불가피

자국 플랫폼의 가치와 전략

생태계 차원별 자국 플랫폼의 기능과 가치

- 차원별 기능과 가치 분석

차원	주요 기능	구체적 가치
경제적 차원	• 거대한 생태계로 작동 • 국가 산업 구조의 핵심 요소 • 다수 이해관계자 상호작용	• 안정적인 디지털 환경에서 국내 기업 성장 • 고용 창출과 국가적 부가가치 상승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적 기회 확대
정치적 차원	• 디지털 주권 유지 • 국가 정책적 자율성 보호 • 데이터 흐름과 정보 통제	• 국가 단위의 전략적 선택권 유지 • 플랫폼 생태계의 균형 조성 • 외부 영향력으로부터 정책 독립성 확보
사회적 차원	• 사용자 간 관계망 형성 • 디지털 포용성 강화 • 사회적 연결성 증진	• 지역 사회 특성 반영 맞춤형 서비스 • 다양한 사용자의 디지털 경제 참여 • 공공 서비스와 결합한 사회적 서비스
문화적 차원	• 국가 문화 정체성 보호 • 문화 콘텐츠 생산과 확산 • 지역 기반 콘텐츠 활성화	• 자국 언어와 문화 기반 서비스 • 지역 사회 고유 정체성 유지 • 글로벌 시장에서 문화적 경쟁력 확보

생태계 차원별 자국 플랫폼의 기능과 가치

- 자국 플랫폼의 핵심 역할
  - 생태계 조성자 역할
    -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기회 제공
    - ✓ 창작자와 소비자 간 균형 있는 관계 형성
    -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역할
  - 문화 보호자 역할
    - ✓ 소규모 언어권 국가의 문화 보호
    - ✓ 자국 문화의 지속 가능성 확보
    -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문화 콘텐츠 육성
- 종합적 가치
  - 자국 플랫폼은 단순한 기술적 도구가 아닌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구조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국가 경쟁력과 자주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전략적 자산

자국 플랫폼 정책의 방향: 가치 균형과 증거기반적 접근

- Van Dijck, Poell, De Waal(2018)의 플랫폼 사회 균형 모델
  - 공공 가치 (Public Values)
    - ✓ 사회적 복지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반영하는 가치로서 사회 전체의 이익과 공공성을 중시
  - 시장 가치 (Market Values)
    - ✓ 경제적 효율성과 경쟁을 통한 혁신 촉진을 중시하는 가치
  - 개인 가치 (Individual Values)
    - ✓ 프라이버시와 자율성을 강조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시하는 가치

- 정책 수립의 핵심 원칙

접근 방법	주요 내용	실행 방안
1. 가치 균형 추구	공공 가치, 시장 가치, 개인 가치 간의 균형	• 자국 플랫폼이 지향해야 할 가치 체계 설정 •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가치 충돌 시 조정 메커니즘 구축
2. 데이터 기반 접근	선제적 규제효과 평가 및 부작용 최소화	• 플랫폼 생태계 경쟁과 가치 데이터 분석 • 규제의 잠재적 부작용 사전 식별 • 효과적인 관리 방안 마련
3. 중소기업 보호	규제 준수 비용 검증 및 경쟁력 보장	• 과도한 규제로 인한 혁신 역량 제약 방지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 중소기업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정책

- **핵심 과제:** 자국 플랫폼이 어떤 차원에서 어떤 내용의 가치를 지향해야 하며, 내재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

디지털 주권 관점에서 자국 플랫폼

- 디지털 주권
  - 국가가 자국의 디지털 자원과 인프라를 통제하고 보호할 수 있는 권한 (데이터, 소프트웨어, 표준과 프로토콜, 프로세스, 하드웨어, 서비스, 인프라 포함)자국 플랫폼의 개념과 정의

- 디지털 주권의 다양한 차원
  - **기업 디지털 주권**
    - ✓ GAFA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국가적 규제를 우회하고 독자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현상
  - **국가 디지털 주권**
    - ✓ 정부가 자국 내 디지털 자원을 통제하고 보호하는 개념 (데이터 현지화 정책, 디지털 인프라 국유화 등)
  - **사이버 주권**
    - ✓ 중국의 대표적 개념으로 국가가 인터넷과 디지털 공간을 완전한 주권의 연장선으로 간주
  - **디지털 중상주의**
    - ✓ 자국민의 정보 접근 통제, 자국 플랫폼 보호, 해외 기업 시장 진출 제한 등의 보호주의적 정책

국가/지역	주요 전략	특징	정책 수단
중국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State Platform Capitalism)	• 자국 플랫폼 적극 육성 • 외국 플랫폼 강력 통제	•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등 국가적 지원 • 해외 IT 기업 시장 진출 제한
유럽 연합	초국가적 디지털 주권 (Supranational Digital Sovereignty)	• 규제를 통한 디지털 주권 확보 •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디지털시장법(DMA) • 디지털서비스법(DSA)
한국	중견국 전략	• 미-중 디지털 패권 경쟁 속에서 • 독자적 경쟁력 확보	• 네이버, 카카오 등 자국 플랫폼 보유 • 국제 협력과 상호운용성 중시

디지털 주권과 자국 플랫폼 정책의 균형적 접근

- **과도한 디지털 보호주의의 부작용**
  - **디지털 보호주의의 위험성**
    - ✓ 기술 발전 저해: 과도한 보호로 인한 혁신 역량 제약
    - ✓ 글로벌 시장 단절: 국제 협력 기회 상실
    - ✓ 경쟁력 약화: 폐쇄적 환경에서의 기술 경쟁력 저하
  - **사례: 인도의 중국 플랫폼 차단**
    - ✓ 중국 플랫폼 대거 차단 정책 시행
    - ✓ 자국 플랫폼 개발 장려
    - ✓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 부족으로 기술 경쟁력 약화 문제 직면

디지털 주권과 자국 플랫폼 정책의 균형적 접근

- **균형적 접근의 필요성**

국가 주권 우선	균형적 접근	기업 주권 우선
• 강력한 국가 통제 • 보호주의적 정책	• 국가 보호와 글로벌 협력의 조화 • 기업 경쟁력과 국가 주권 동시 고려	• 시장 중심 • 최소 규제
• 국가 주권 보호 • 자국 플랫폼 육성	• 지속 가능한 발전 • 국제 경쟁력 확보	• 혁신 촉진 • 효율성 극대화
• 기술 발전 저해 • 글로벌 고립	• 복잡한 정책 조정 • 이해관계자 갈등	• 국가 주권 약화 • 사회적 격차 심화
• 중국의 디지털 중상주의	• EU의 초국가적 디지털 주권 • 한국의 중견국 전략	• 미국의 자유시장 중심

- **권장 접근법**
  - 국가가 자국 플랫폼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동시에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하고, 국제적 협력과 기술적 개방성을 유지하는 전략 필요

해외 국가의 시사점과 제언

17

EU, 방어와 육성, 규칙 설정자(rule-setter)로서의 지위를 확보

- **EU의 플랫폼 규제의 이중적 접근방식**
  - 자국 플랫폼 부재라는 **'방어적 현실'**에 대한 대응
  - 유럽의 가치에 기반한 **'공격적 질서 재편'**
  - 이는 불리한 상황을 역이용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만들려는 고도의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할 수 있다.
  - EU는 규제를 통해 **거대 글로벌 플랫폼의 힘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Digital Europe Programme)' 등을 통해** 자국의 AI, 클라우드,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육성 정책을 진행**
  - 기존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와 규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접근법

정책	주요 내용	목적
디지털시장법 (Digital Markets Act, DMA)	• 게이트키퍼 플랫폼 규제 • 상호운용성 의무 • 자사 우대 금지	• 글로벌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견제 •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디지털서비스 (Digital Services Act, DSA)	• 콘텐츠 관리 의무 • 투명성 강화 • 불법 콘텐츠 대응	• 디지털 서비스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 사용자 보호 강화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GDPR)	•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데이터 처리 투명성 • 강력한 제재 조치	• 개인의 데이터 주권 보장 •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 처리 방식 영향

주요국 디지털 플랫폼 정책 사례 - 유럽

- 독일: 산업 플랫폼과 데이터 주권

정책/프로젝트	주요 내용	목적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 전통 제조업과 ICT 융합 • 스마트 팩토리 구축 • B2B 플랫폼 생태계 기반 조성	• 미국 소비자 플랫폼 대신 • 독일 강점인 산업 데이터 플랫폼 시장 선점
디지털 허브 이니셔티브	• 전국 12개 디지털 허브 지정 • 지역별 특화 산업과 스타트업 연결 • 중견기업-연구소 협업 촉진	• 자생적인 디지털 생태계 강화 • 지역 특성 기반 혁신 클러스터 조성
가이아-X 프로젝트	• 연합형 데이터 인프라 구축 • GDPR 준수 투명하고 안전한 데이터 공간 • 사용자 데이터 통제권 보장	• 미국 클라우드 의존도 감소 • 유럽 데이터 주권 강화

주요국 디지털 플랫폼 정책 사례 - 유럽

- 프랑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 라 프렌치 테크 (La French Tech)
    - ✓ 2013년 시작
    - ✓ 프랑스를 '스타트업 국가'로 전환
    - ✓ 자금 지원, 비자 간소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 ✓ 다수 유니콘 기업 배출
  - **프랑스 2030 계획**
    - 70억 유로 투자
    - AI, 양자 컴퓨팅 등 미래 전략 기술
    - 디지털 전환 가속화
    - 기술 자주권 확보

- 유럽 접근법의 특징
  - 규제 강화/자체 생태계 육성 동시 추진, 특히 독일은 산업 특화, 프랑스는 스타트업 육성에 중점을 두어 각국의 강점을 활용한 차별화된 전략 구사

일본의 규제 플랫폼 역설에 대한 고려

- 일본: 하이브리드 디지털 전략

정책 영역	주요 내용	특징
선별적 규제	•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 (거래투명화법) • 스마트폰에서 이용되는 특정 소프트웨어의 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	• 특정 분야 정밀 타겟 • 혁신 저해 최소화 • 애플, 구글 모바일 OS 규제
디지털청 중심 DX	• 아날로그 규제 전수 조사 및 개혁 • 민간 부문 DX 지원 • 세제 혜택과 보조금 제공	• 범국가적 디지털 전환 • 2025 디지털 절벽 극복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	• 지방 활성화와 디지털 기술 결합 • 자율주행, 원격의료, 스마트농업 • 도시-지방 격차 해소	• 사회 문제 해결 도구 • 국가 균형 발전

주요국 디지털 플랫폼 정책 사례 - 아시아

- 중국: 사이버 강국 건설

정책 영역	주요 내용	목표
디지털 차이나 발전 계획	• 2025년까지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 GDP 10% 달성 • AI, 데이터 산업 등 8대 중점 분야 • 알리바바, 텐센트 등 자국 기업 보호	• 자국 플랫폼 보호 및 육성 • 디지털 경제 주도권 확보
디지털 실크로드	•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일환 • 5G, 데이터센터, 스마트시티 솔루션 수출 • 중국 기술 표준의 국제적 확산	• 기술 표준의 국제적 확산 • 디지털 영향력 확대

- 인도: 디지털 인디아와 공공 인프라
  - 인디아 스택 (India Stack)
    - ✓ 개방형 API 세트
    - ✓ 생체인증 기반 디지털 신원(Aadhaar)
    - ✓ 통합 결제 인터페이스(UPI)
    - ✓ 전자서명, 개인 데이터 보관함(DigiLocker)
  - 상향식(Bottom-up)
    - ✓ 14억 인구 디지털 경제 편입
    - ✓ 공공 인프라 기반 스타트업 생태계
    - ✓ 핀테크 혁신 서비스 저비용 출시
    - ✓ 데이터 현지화 정책 강화

국가별 디지털 플랫폼 전략 비교 분석

국가	접근 방식	핵심 정책	전략적 강점	주요 특징
유럽연합	규제 중심	• DMA/DSA, GDPR •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	• 강력한 규제 체계 • 사용자 보호	• 초국가적 협력 • 글로벌 표준 선도
독일	산업 특화	• 인더스트리 4.0 • 가이아-X	• 제조업 디지털화 • 데이터 주권	• B2B 플랫폼 중심 • 연합형 인프라
프랑스	스타트업 육성	• 라 프렌치 테크 • 프랑스 2030	• 혁신 생태계 • 유니콘 배출	• 스타트업 국가 • 미래 기술 투자
중국	국가 주도	• 디지털 차이나 • 디지털 실크로드	• 강력한 국가 지원 • 기술 표준 확산	• 플랫폼 자본주의 • 사이버 주권
인도	공공 인프라	• 인디아 스택 • 디지털 인디아	• 대규모 인구 • 공공 API 활용	• 상향식 접근 • 디지털 포용
일본	하이브리드	• 선별적 규제 • 디지털청 DX	• 사회 문제 해결 • 실용주의	• 신중한 규제 • 전 사회 DX
한국	중견국 전략	• 네이버/카카오 • K-디지털 뉴딜	• 자국 플랫폼 보유 • 기술 혁신	• 균형적 접근 • 국제 협력

- **전략 패턴 분석**
  - **규제 우선형 (EU):** 자국 플랫폼 부재시 강력한 규제로 공정 경쟁 환경 조성
  - **국가 주도형 (중국):** 강력한 정부 지원과 외국 기업 제한으로 자국 플랫폼 육성
  - **공공 인프라형(인도):** 정부 주도 디지털 인프라로 민간 혁신 촉진
  - **균형 추구형 (한국, 일본):** 규제와 육성, 보호와 개방의 균형점 모색

한국의 중견국 전략과 자국 플랫폼 정책

- **한국의 위치:**
  -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일부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몇 안 되는 국가로서, 미-중 디지털 패권 경쟁 속에서 독자적인 경쟁력 확보 필요

- **중견국 전략의 정책 고려 요소**

전략 요소	구체적 내용	기대 효과
독자적 경쟁력 확보	• 자국 플랫폼의 기술 혁신 지원 •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 •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 유지	•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 감소 • 자주적 디지털 생태계 구축
국제 협력 강화	• 다양한 국가와의 디지털 파트너십 • 국제 표준 제정 참여 •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 • 기술 발전 가속화
상호운용성 중시	• 플랫폼 간 연결성 확보 • 개방형 표준 채택 • 사용자 선택권 보장	•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확보 • 혁신과 경쟁 촉진
균형적 규제	• 과도한 보호주의 지양 • 공정경쟁 환경 조성 • 혁신 친화적 정책	•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속적 혁신 생태계 조성

한국의 중견국 전략과 자국 플랫폼 정책

- **한국 자국 플랫폼의 강점과 과제**
  - **강점**
    - ✓ 현지화 역량: 한국어 기반 서비스와 현지화된 콘텐츠
    - ✓ 국내 생태계: 네이버, 카카오 등을 중심으로 한 통합 생태계
    - ✓ 기술 혁신: AI, 핀테크 등 핵심 기술 역량
    - ✓ 정부 지원: K-디지털 뉴딜 등 정책적 지원
  - **과제**
    - ✓ 글로벌 확장: 해외 시장 진출 및 확대
    - ✓ 기술 경쟁력: 글로벌 빅테크와의 기술 격차
    - ✓ 규모의 경제: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 규모
    - ✓ 인재 확보: 글로벌 수준의 전문 인력 부족

- **중견국 전략의 핵심**
  -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강점을 활용하되, 국제 협력과 상호운용성을 중시하여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중견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

향후 과제

- **자국 플랫폼 정책의 방향**
  1. **자국 플랫폼에 대한 개념화 및 인식 제고:** 플랫폼의 명확한 정의와 분류 체계 구축, 정책 목적에 따른 유연한 적용
  2. **생태계 접근:** 단순한 기업 지원을 넘어 플랫폼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 종합적 정책
  3. **균형적 가치:** 공공 가치, 시장 가치, 개인 가치 간의 균형 추구
  4. **글로벌 학습:** 주요국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한 최적 전략 도출

- **단계별 정책 추진 방안**

단계	주요 과제	추진 방안
1단계 기반 조성	• 자국 플랫폼 개념 정립 • 법제도 기반 마련 •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논의 • 해외 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 • 정책 추진 체계 수립
2단계 생태계 강화	• 자국 플랫폼 경쟁력 제고 • 공정경쟁 환경 조성 • 혁신 생태계 구축	• 기술 혁신 지원 확대 • 중소기업 플랫폼 참여 촉진 • 인재 양성 및 확보
3단계 글로벌 확장	• 국제 협력 강화 • 글로벌 시장 진출 • 디지털 외교 추진	• 국제 표준 제정 참여 • 해외 진출 지원 강화 • 디지털 무역 협정 체결

결론 및 향후 과제

- 향후 연구개발 과제

연구 영역	세부 과제	기대 효과
실증적 접근	• 자국 플랫폼의 경제적 효과 측정 • 규제 정책의 영향 분석 • 국제 비교 연구 확대	• 정책의 실효성 검증 • 최적 정책 조합 도출
기술개발	• 플랫폼 기술의 미래 전망 • AI, 블록체인 등 신기술 영향 • 상호운용성 기술 개발	• 기술 변화에 대응한 정책 수립 • 혁신 생태계 조성
거버넌스 모델 탐구	• 다중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 국제 협력 체계 구축 • 분쟁 해결 메커니즘	• 효과적인 정책 추진 체계 구축 • 국제 협력 강화

황용석, 플랫폼의 법과 정책 세미나, 2025.06.17. 27

Ⅳ

전자상거래 플랫폼 가치사슬 분석 및 생태계 활성화 저해요인 연구

유병준 교수
서울대학교

전자상거래 플랫폼 가치사슬 분석 및 생태계 활성화 저해 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유병준 교수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가치사슬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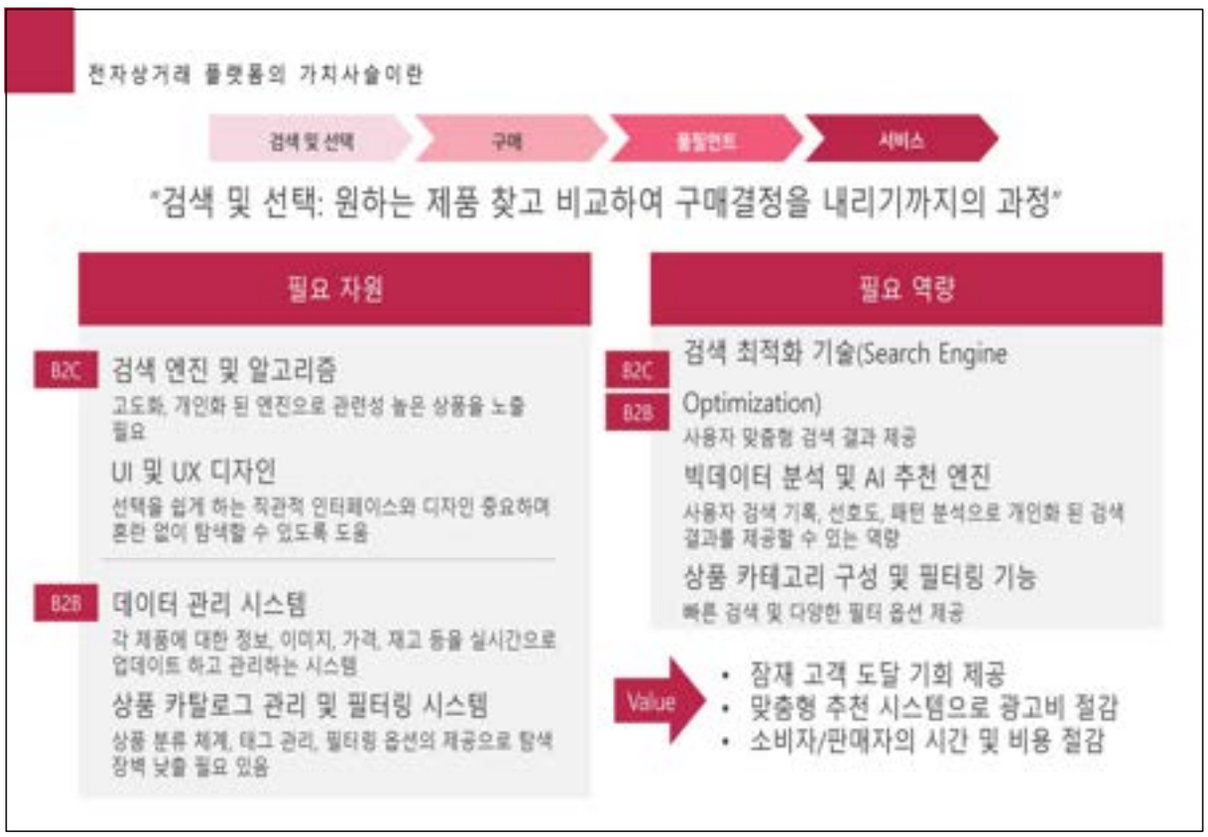
"가치사슬: 기업의 운영을 위한 행위들의 사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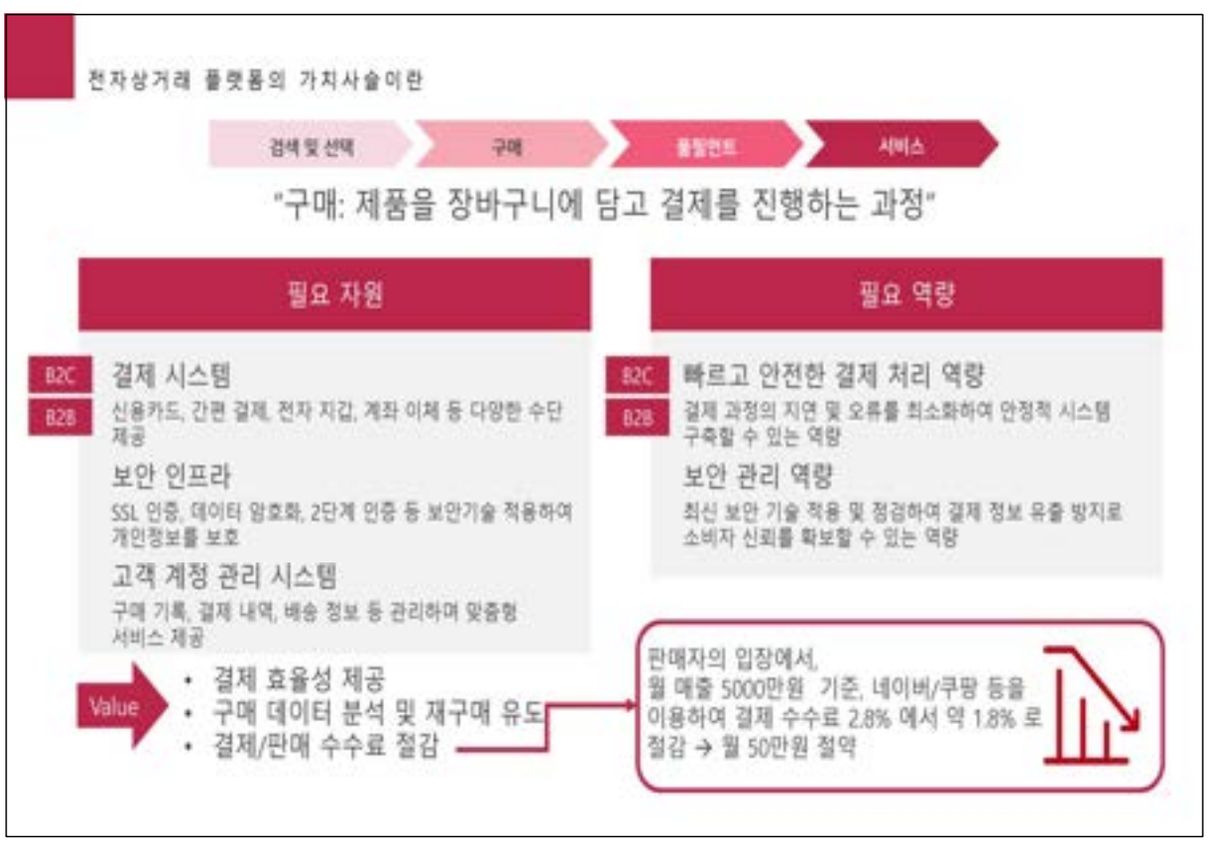
검색 및 선택	구매	풀필먼트	서비스
원하는 제품 찾고 비교하여 구매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를 진행하는 과정	주문 제품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물류 과정	제품을 구매/판매 한 후 모든 서비스를 포함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생태계: 종합몰 형태의 다양한 플랫폼들이 상호경쟁하는 다원적인 구조

- 독점문제에서 자유로워 판매자 및 소비자에 많은 선택권과 서비스 품질을 제공
- 차별화된 경쟁 전략으로 판매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다각적인 가치를 제공

	한국	미국	EU
항목 A	네이버(17%, '21)	아마존(41%, '21)	아마존(36%, '21)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가치사슬이란
검색 및 선택
구매
풀필먼트
서비스
"검색 및 선택: 원하는 제품 찾고 비교하여 구매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
필요 자원
B2C
검색 엔진 및 알고리즘
고도화, 개인화 된 엔진으로 관련성 높은 상품을 노출 필요
UI 및 UX 디자인
선택을 쉽게 하는 직관적 인터페이스와 디자인 중요하여 혼란 없이 탐색할 수 있도록 도움
B2B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각 제품에 대한 정보, 이미지, 가격, 재고 등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상품 카탈로그 관리 및 필터링 시스템
상품 분류 체계, 태그 관리, 필터링 옵션의 제공으로 탐색 장벽 낮출 필요 있음
필요 역량
B2C
B2B
검색 최적화 기술(Search Engine Optimization)
사용자 맞춤형 검색 결과 제공
빅데이터 분석 및 AI 추천 엔진
사용자 검색 기록, 선호도, 패턴 분석으로 개인화 된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상품 카테고리 구성 및 필터링 기능
빠른 검색 및 다양한 필터 옵션 제공
Value
• 잠재 고객 도달 기회 제공
• 맞춤형 추천 시스템으로 광고비 절감
• 소비자/판매자의 시간 및 비용 절감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가치사슬이란
검색 및 선택
구매
풀필먼트
서비스
"구매: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를 진행하는 과정"
필요 자원
B2C
B2B
결제 시스템
신용카드, 간편 결제, 전자 지갑, 계좌 이체 등 다양한 수단 제공
보안 인프라
SSL 인증, 데이터 암호화, 2단계 인증 등 보안기술 적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
고객 계정 관리 시스템
구매 기록, 결제 내역, 배송 정보 등 관리하며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 역량
B2C
B2B
빠르고 안전한 결제 처리 역량
결제 과정의 지연 및 오류를 최소화하여 안정적 시스템 구축할 수 있는 역량
보안 관리 역량
최신 보안 기술 적용 및 점검하여 결제 정보 유출 방지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역량
Value
• 결제 효율성 제공
• 구매 데이터 분석 및 재구매 유도
• 결제/판매 수수료 절감
판매자의 입장에서,
월 매출 5000만원 기준, 네이버/쿠팡 등을 이용하여 결제 수수료 2.8% 에서 약 1.8% 로 절감 → 월 50만원 절약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가치사슬이란

검색 및 선택 → 구매 → 풀필먼트 → 서비스

"풀필먼트: 주문 제품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물류 과정"

필요 자원	필요 역량
B2C B2B 재고 관리 시스템(WMS) 실시간 재고 상태 모니터링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상품의 유통 기한, 수량 정보 관리 재고 부족 및 과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B2C B2B 물류 운영 최적화 역량 RPA,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최적의 창고와 경로 선택을 통해 출고 시간 최소화하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역량
물류 창고와 공동 물류 센터 중소 판매자의 제품을 위한 공동 창고를 운영하여 물류 관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자원	실시간 추적 및 고객 커뮤니케이션 역량 실시간 배송 상태 추적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 고객과 신속한 소통할 수 있는 역량 → 신뢰도 상승
확장된 배송 네트워크 다양한 상품을 적시 보관 및 관리하여 신속한 배송을 지원하고, 제품과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	공급망 관리 및 협업 역량 중소 기업 생산 능력 및 재고 상태 파악하여 적시 재고 주문 및 배송을 조율할 수 있는 역량

Value
- 중소 판매자 배송 및 물류 비용 절감
- 빠르고 정확한 배송 → 신뢰도 상승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가치사슬이란

"쿠팡, 로켓배송과 거대 물류 네트워크로 판매자 매출 증대 및 소비자 만족도 충족"

로켓 배송과 물류 네트워크
- 전국 100 여개 물류 센터 운영, 한국 인구 70%가 10km이내 위치

로켓배송과 물류 센터의 가치 창출
- 빠른 배송으로 만족도와 재구매 의향 증가
- 배송 부담 감소, 제품 생산 및 마케팅에 집중 가능
- 물류 센터 확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 일자리 창출 및 판매자에 전국적 판매 기회 제공
- 물류 효율성 증대 및 비용 절감
-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재고 관리 및 주문 처리 최적화

시장 영향
- 배송 기간 단축해 경쟁 구도 재편
- 국내 풀필먼트 시장의 표준 향상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가치사슬이란

검색 및 선택 → 구매 → 물류인프 → 서비스

"서비스: 제품을 구매/판매 한 후 모든 서비스를 포함"

필요 자원

B2C **자동화 고객 서비스 도구**
챗봇 및 AI 기반 상담 시스템 활용하여 24시간 고객 지원 및 신속한 응대

고객 지원 시스템(CRM)
실시간 데이터 관리하고 고객의 문의 및 불만을 빠르게 처리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B2B **공급 업체 관리 시스템(SRM)**
재고 상태, 제품 품질, 공급 일정 등을 모니터링 하여 꾸준히 최적의 공급망 유지

데이터 공유 및 통합 시스템
플랫폼과 판매자 간 실시간 재고, 주문, 판매 데이터 공유 원활한 소통 지원하여 소비자/판매자에 모두 혜택 제공

필요 역량

B2C B2B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역량**
고객 행동 데이터 분석해 문제 예방 및 서비스 개선

옴니채널 서비스 역량
이메일, 전화,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에서 일관된 서비스 제공하여 고객 경험 극대화

지속적 개선과 피드백 반영 역량
고객 피드백 수집 및 서비스 개선을 즉각 반영할 수 있는 역량

Value
- 고객 데이터 관리 비용 절감
- CRM 솔루션 도입 비용 절감
- 개인화 된 혜택, 할인, 포인트 적립으로 경제적 이익 제공 → 재구매율 상승

전자상거래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저해 요인

"네이버, 비즈어드바이저로 판매자에 비즈니스 인사이트 제공"

네이버 Biz Advisor

- 판매자에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비즈니스 인사이트 제공
  - 주요 고객군 분석, 상품 트렌드 파악 지원
  - 마케팅 시기 최적화 및 재고 관리 지원
- 성과 및 매출 효과
  - 일평균 방문자 수 89% 증가
  - 방문 횟수 151% 증가
- 전자상거래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시장: 연간 약 1조 4000억의 추가 이익 창출 가능성 기대
  - 판매자: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매출 증대, 빠른 의사결정 지원, 고객 관리 효율성 향상

전자상거래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저해 요인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가치사슬 내 플랫폼 성장, 생태계 활성화, 혁신 촉진의 필요성 증대"

플랫폼법

[목적]
- 시장의 공정성 확보 및 소비자를 보호하며 플랫폼 간 경쟁 활성화

[규제방식]
- 사전지정제: 지배적 플랫폼 사전에 지정하여 규제
- 금지 행위: 멀티 호밍 제한 등 불공정 행위 명시적으로 금지

[문제점]
-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다양한 사업모델 반영에 어려움
- 해외 플랫폼 규제 및 실효성 낮음
- 국내 플랫폼 역차별 및 과도한 규제로 혁신 저해 예상

[목적]
플랫폼 산업 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와 중소 기업 보호

[규제 초점]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방지
시장 내 경쟁 저해 행위에 대한 제지 강화

공정거래법 개정

[목적]
-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불공정 행위에 실질적 대응

[규제방식]
- 사후 규제: 위법 행위 발생 후 지배적 플랫폼 여부 판단 및 제재
- 강화된 조치: 임시 중지 명령 도입하고 과징금 부과율 상향 (6% → 8%)

[대상 요건]
- 특정 시장 점유율 기준 강화
- 1개 플랫폼 60% 이상 또는 상위 3개 플랫폼 85% 이상

[향후과제]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 환경 조성
국내 가치사슬 내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상생 환경 구축

전자상거래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저해 요인

"국외 가치사슬 내 플랫폼, 국내 전자상거래 생태계 활성화 저해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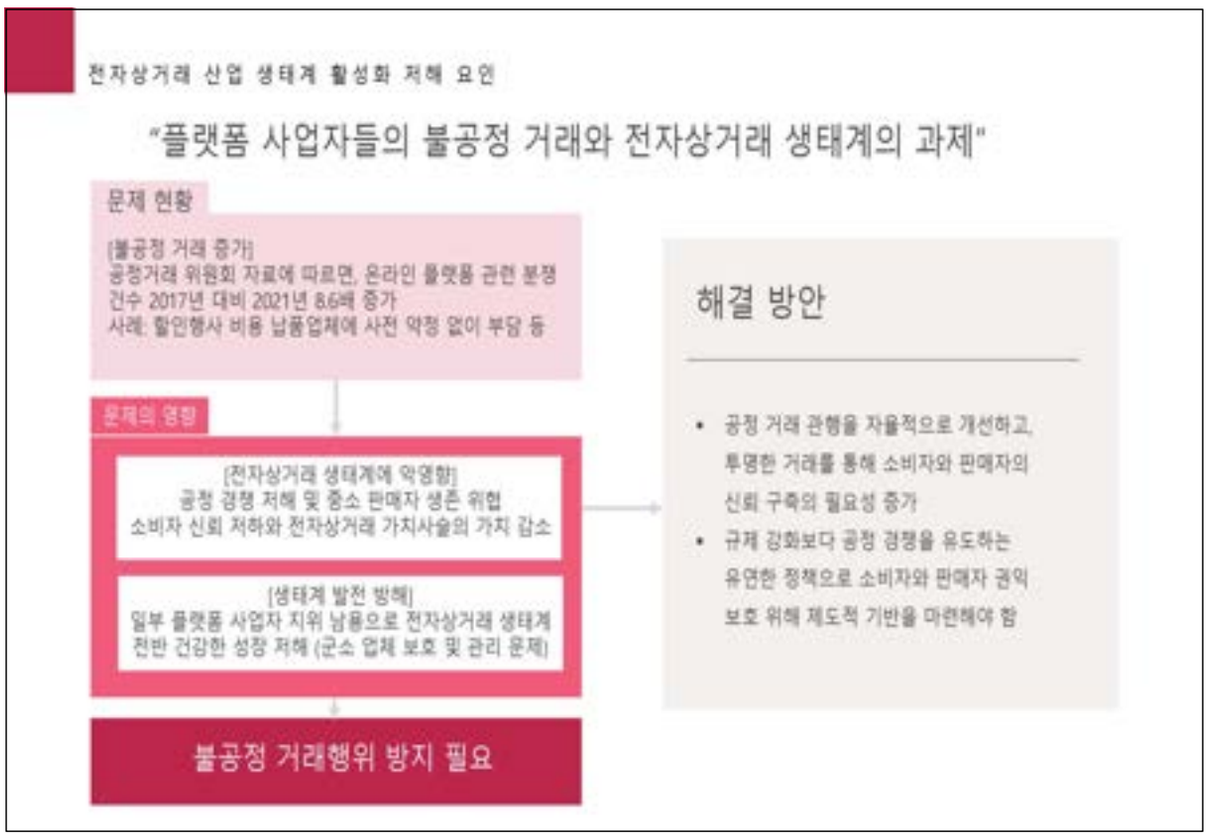
C커머스의 성장
- 국내 및 글로벌 영향력 확대
- 2023년 국내 소비자의 C커머스 구매액 약 3조 2870억원 (전년 대비 121% 증가)
- 국내 주요 플랫폼(11번가, G마켓) 순위 하락

국내 가치사슬 내 플랫폼의 대응, 우려

대응
- 프로모션 및 서비스 품질 개선
- 소비자 보호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우려
- 가격 경쟁에서의 불리함 지속
- 정부 차원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필요
- 소비자 보호 제도 강화 필요

향후 방향
- 국내 전자상거래 가치사슬의 안정화, 활성화 필요
- 해외 플랫폼의 가격 경쟁력, 제품 다양성에 대응할 전략적 접근
- 국내 플랫폼의 지속적 혁신과 경쟁력 강화


전자상거래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저해 요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거래와 전자상거래 생태계의 과제"
문제 현황
[불공정 거래 증가]
공정거래 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건수 2017년 대비 2021년 8.6배 증가
사례: 할인행사 비용 납품업체에 사전 약정 없이 부담 등
문제의 영향
[전자상거래 생태계에 악영향]
공정 경쟁 저해 및 중소 판매자 생존 위협
소비자 신뢰 저하와 전자상거래 가치사슬의 가치 감소
[생태계 발전 방해]
일부 플랫폼 사업자 지위 남용으로 전자상거래 생태계 전반 건강한 성장 저해 (군소 업체 보호 및 관리 문제)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 필요
해결 방안
• 공정 거래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의 신뢰 구축의 필요성 증가
• 규제 강화보다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유연한 정책으로 소비자와 판매자 권익 보호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토론

좌장 : 이성엽 교수

고려대학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

정혜련 교수(경찰대학)

강준모 CECG부대표(법무법인 광장)

박유리 선임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건영 디지털플랫폼팀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혜선 이용자정책총괄과장(방송통신위원회)

토론 1

한국의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

- 아마존의 역설에서 K플랫폼 도약의 전략으로 -

정혜련 교수 (경찰대학)

우리에게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아마존의 역설(Amazon's Paradox)'은 과거 비즈니스모델을 탈피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유통시장을 장악하게 된 미국의 한 기업의 성공신화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마존이란 대기업의 성공신화는 미경쟁당국(FTC)에게는 또 다른 독과점기업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자상거래와 ICT에 기반한 기업들의 폭발적인 성공과 성장이 과거 경쟁법 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반경쟁적 요소를 중점적으로 과거의 경쟁법에 관한 규제 실효성에 큰 의문을 던지게 되었고, 이 현상은 미국에 국한하지 않고 최근 몇 년 동안 전세계적인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기업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전자상거래 업계의 신화가 된 아마존의 이야기에 대하여 책 저자인 리나칸은 불행히도 이는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페이스북인 메타 또한 기존 전통적인 규제방식에 의해서는 바로 포착되기 힘든 새로운 기준의 잠재적 반경쟁적 요소를 지니게 되는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현재 빅테크라고 불리는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빅테크 성공사례는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시장에 혜성같이 등장하여 기존의 반독점법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되었던 과정을 가진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새로운 기술을 결합하여 어떻게 이를 이용하였느냐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대한민국은 매우 어려운 시절의 아마존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즉, 기업의 존부가 경영실패로 이어질지, 아니면 성공으로 대역전을 이룰 수 있을 지에 관해 막연한 불안과 경제적 침체의 상황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마존의 침체시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모두 이야기 하는 것처럼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인공지능제공서비스와 함께 시장 또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업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불가능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모두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 상황은 국내의 입법정책 및 기업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국 기업에게는 하나의 기회로 (작용)역이용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독점이라는 것의 폐해는 그 시장을 장악한 기업이 더이상 소비자와시장의 전체적 부의 최대화를 만드는 것에 관심을 끄고, 자신의 부의 축적의 최대치에 방점을 찍는 것에 유일하게 관심을 가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독과점의 폐해는 한 국가 안에서 등장하거나 유지되는 이유로 규제의 필요가 정당화 되고, 이를 위한 규제들은 상당히 성공적이었으나 현재는 전혀 그런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각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적 번영과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외부 거대 기업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 체제를 갖추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매우 바쁘게 움직여왔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럽의 선례를 대거 수용한 법률(안)이 연이어 국회에 제출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럽의 디지털시장법과 같은 유럽연합형 반독점법과 같은 내용의 입법을 국내의 상황 분석 없이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저의 논문에서 여러 차례 주장한 바와 같이, 경쟁정책은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상황과 관련 입법 그리고 산업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내용을 고려하여 단기적인 분석보다는 중장기적인 전략 및 분석에 관한 통찰력 있는 연구결과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상황과 정책에 부합하는 입법 혹은 법률의 설계가 한국에서의 초세계적인 전자상거래 및 유통기업의 신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또한 초일류 인공지능 기업의 탄생으로 연결되는 지는 이러한 통찰에 바탕한 입법과 정책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제2의 아마존의 탄생”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강력한 자연독점과 같은 수요독점의 초거대 초세계적 기업에 대한 새로운 경쟁자의 탄생이자, 국가적 차원에서 초거대기업의 독주를 자연스럽게 통제하여 시장의 기능을 통해서 정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며 바람직한 방법과 시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제가 연구하는 경쟁법, 즉 반독점법에서 우려하는 전세계적 독과점의 폐해를 통제할 수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전략이며, 이와 같은 통제장치와 힘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저의 토론 제목을 “아마존의 역설이 K플랫폼도약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서 토론제목을 이와 같이 붙이게 된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박사학위논문을 완성하기 위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반독점 및 불공정규제 사례들을 정리 분석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어찌보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데요, 즉 새로운 형태의 시장경쟁제한요소에 관한 판단 기준에 관하여 변화를 줄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다루었던 수요독점에 관한 기준의 설정과 필요가 계속 논의가 되고 요청되어지만, 즉각적으로 이와 같은 새로운 기준은 적용되지 않았고, 오랫동안 적용해온 기준에 대한 반성과 폐해에 대한 연구결과가 축적되

고 난 이후에야 드디어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연구한 결과들은 가지고 기업들은 엄청난 영업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제공받게 되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문제점(당시 법률에 위반하여 반독점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시장점유율에 미치니 않음에도 시장에서 상당히 시장지배적지위를 누리며 반경쟁적인 방법을 통해 엄청난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상당 유출시키는 간접적인 방법이 되었고, 경쟁당국이 이러한 위험요소의 인지 이전에 법이나 규율을 조정하기 전에 이미 시장에 안착하여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시간이 한참이나 흘러 결국 이 기준은 미경쟁당국에 의해 반영이 되었지만 **이미 다른 시장 혹은 비즈니스모델로 빠르게 성장·진화하게 되었고 이것은 또 다른 새로운 기준설정을 위한 논의와 분석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당연하게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함수값과 요인을 더해 복잡한 데이터 분석을 요구하는 소위 '규제타당에 관한 비용분석'을 더욱 복잡하고 난해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플랫폼 및 인공지능과 관련한 입법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까지 활발히 논의되어 이미 입법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호주를 비롯하여 캐나다.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도 점차 관련 규제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입법의 현상이 무엇 때문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관하여 각 국가들은 그들만의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본서에서 플랫폼의 법과 정책은 바로 이러한 목적과 필요에 맞추어 입법의 이유와 정책의 함의를 연결하여 살펴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업한 미국과 중국의 플랫폼관련 입법동향에서는 최근의 미국과 중국의 플랫폼산업과 관련한 개정법과 특별법을 소개하고 이를 미국. 유럽. 한국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최근의 주요국들의 입법은 특히 미국의 경우는 현재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집중하여 만들어진 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해당 시장 및 관련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과거부터 존재하였던 기존 법률에 대한 국내사업자에 관한 규제방법에 추가하여 유럽연합처럼 빅테크에 대한 외국사업자에 대한 특별장치를 만들거나, 국내 인프라와 사업자 보호를 위한 기존법령체계를 정비하는 입장과 내용이 추가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각국의 입장은 대동소이하며, 다만 대륙법 혹은 유럽연합체계의 특징과 차이점 그리고 각 유럽 내의 각국 국내법제정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미국의 경우처럼(판례의 형성과정처럼) 개별법 하나 만으로 전반적 생태계를 파악하기는 것은 관련당국 혹은 민간기관에게는 당연히 어렵고, 이는 비용과 시간의 투입이 만만치 않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할 만큼 복잡한 합동작업이 필요합니다. 즉, 시장의 연결고리, 전체 생태계, 구체적인 사안, 그리고 이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개별 법률 및 정책의 함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합동작업이 추진되어야 비로소 제2의 빅테크, 유니콘, 데프콘 기업들이 한국에서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저자로 참여한 “미국 및 중국의 플랫폼 입법 동향 및 정책”편의 결론이자 시사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최근 미국에서의 바이든 행정부 이후 트럼프 2.0 정부의 플랫폼 입법(개인정보보호, 사이버안보, 데이터, 인공지능)에 관한 전반적인 특징 및 시사점입니다.

트럼프 2.0정부의 플랫폼 입법 및 정책과 주요 변화

1. 개인정보보호법 정책 변화

- 규제 동결령(2025.1.20) 시행 White House1
  COPPA 규칙 개정안, DOJ 민감데이터 이전 규칙, FTC 네거티브 옵션 규칙 등 보류
- CFPB 개인금융데이터 권리법 중단 Privacy World Blog2

2. 사이버보안 정책 재편

- 2025년 6월 6일 사이버보안 행정명령 서명 Mayer Brown3
- 바이든·오바마 행정명령 개정으로 규제 완화 및 자율성 확대
- AI 사이버보안 초점을 취약점 관리로 축소 White House4

3. 인공지능법 대전환

- 바이든 AI 행정명령(EO 14110) 철회 후 새 AI 행정명령(EO 14179) 발표
- “이념적 편향 없는 AI 시스템” 개발 강조 White House5
- 안전·개인정보보호 중심에서 규제완화·혁신 촉진으로 전환

4. 주요 변화

- 연방기관의 규제 부담 완화(기존 바이든 정부에서 보완된 전문성 바탕으로한 경쟁규제 기관의 역량 재고)
- 외국 위협 대응에 집중(자국 기업 규제관련 입법 철회 및 국외 기업 및 리스크관리에 집중)
- 미국 AI 글로벌 리더십 강화 목표(인공지능규제책에서 진흥으로의 방향전환)

5. 주 차원 개인정보보호법 현황

- 2025 8 , 2026 총 20개 주 적용 (타 주법의 내용을 기초로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 보완 및 추가 Gibson Dunn6

· 연방법 부재로 주법이 계속 확산되는 추세(주 차원의 재량적 효율적 입법사항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확대, 연방법 차원의 총괄. 구체적인 입법제안은 중지되거나 폐기)

6.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연방 규제 완화로 준수 부담 일부 경감(기업의 규제준수비용에 관한 ftc보고서)

· 주 차원 규제는 강화 지속

· AI 혁신 환경 개선으로 기술 발전 가속화 기대(시장 잠재력 기반한 성장에 집중지원)

7. 향후 전망

· 규제 완화와 보안 강화의 균형점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
; 기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주법 및 추가된 생체인식, 아동청소년(특히, 어린이) 관련추가 규제 참고. 단, 국내 시장에 맞는 우리 방식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

· 중국 등 외국 위협에 대응 강화
; 해외 사이버테러 및 시장잠식 등의 위험제거 인프라 구축은 매우 중요

· 민간-정부 협력 확대 필요
;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을 위한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2

플랫폼 시대의 법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 토론문

강준모 CECG부대표 (법무법인 광장)

❍ 새 정부의 플랫폼 규제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독과점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및 갑을관계 규제, 수수료 관련 규제, 소비자·노동자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

- 이중 온플법을 통한 사전규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으나, 미국의 반발로 실제 입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사전규제보다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사후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질 가능성이 높음
-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 심사지침의 내용을 법제화시키는 데에 초점
- 이외 배달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수수료율 상한제 등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

❍ 일련의 규제 도입이 국내 생태계에서 필요한지, 규제 도입이 가져올 부작용은 무엇인지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

- 인프라의 성격이 강한 일부 영역(OS, 앱마켓, 클라우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 플랫폼 영역은 글로벌 빅테크 지배력이 약하고, 국내 플랫폼 기업 간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오히려 자국 플랫폼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지?

서비스 영역	주요 기업
지도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구글맵스
음식배달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숙박앱	야놀자, 여기어때, 인터파크투어;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부동산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호갱노노
쇼핑	**쿠팡**, **네이버**, 11번가, SSG, 인터파크…
웹툰	**네이버웹툰**, **카카오웹툰**, (기타 전문 플랫폼)
리더앱	**네이버시리즈**, **카카오페이지**, (문피아, 리디북스…)
동영상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웨이브, 쿠팡…
택시앱	**카카오T**, 우티

- 입점업체에 대한 지배적 플랫폼의 행위를 규제할 필요는 있으나,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며, 현재 시점에서 규제의 필요성 또한 의문 → 가령 쿠팡이나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최근의 판결이 법의 문제이거나 규제가 부족하기 때문?
- 또한, 단순히 점유율이나 매출,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함 → 가령, 검색엔진은 키워드 중심의 검색에서 AI 챗봇을 이용한 검색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영역별로 다양한 채널이 존재함에 따라 게이트웨이의 역할로서 검색엔진의 역할은 줄어드는 추세

❍ 수수료율에 대한 규제 또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수수료율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가 혁신의 인센티브를 저해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함

- 플랫폼 기업의 높은 매출/이익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이용자 착취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혁신 경쟁에서 승리한 기업에 누리는 과실일 수도 있음
- 해외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규제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수수료율 규제가 가격 인하나 거래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카드 사용자 혜택 감소(서비스 품질 저하)나 연회비 인상(풍선효과), 카드회원 이탈로 인한 신용카드업 위축

❍ 플랫폼 기업이 AI 개발은 물론, AI 기술의 적용에도 큰 역할

- 플랫폼은 데이터, 인프라, 투자자금 부문에서 일반 기업에 비해 우위에 있으며, AI 기술 적용으로 인한 파급효과도 빠르고 광범위(이용자 기반, 서비스 영역, 기술력 등)
- AI 관련하여 항상 지적되는 사항인 데이터 부족과 활용 어려움, 개발/서비스 인프라 투자 부족 등을 극복하는 데에 플랫폼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유리한데, 오히려 혁신의 동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지 → AI 강국을 만들어갈 player가 누구?

토론 3

토론문

박유리 선임연구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제 1: 플랫폼 자본주의

- SPC라는 개념 자체가 플랫폼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
- 3가지 시각(규제 필요론, 혁신 저해론, 국내기업 보호론)이 상호배타적이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어디인지?
  - 진흥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 어떤 진흥 정책이 플랫폼 경제에서 유효할 수 있을지?

2

발제 2: 한국의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및 평가

- 입점업체 보호, 입점업체 협상력 강화, 모두가 행복한 배달문화?
- 온라인 플랫폼 법 제정, 자율규제 같이 갈 수 있을까?
- AI 패권 경쟁 시대, 플랫폼 없이 AI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가능할까
  "AI는 자본과 기술, 그리고 강력한 정부 지원이 결합된 강대국 게임" (에릭 슈미츠)
-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플랫폼 정책 수립 필요에 동의
  - 규제가 전체 플랫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 기술 인프라, 서비스를 수직통합하여 규모, 범위의 경제를 누리는 해외 빅테크 중심의 생태계 경쟁에서 자국 플랫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3

발제 3: 자국 플랫폼의 가치 평가

- 협의, 중위, 광의 자국 플랫폼 분류의 장단점
- 플랫폼 "산업 정책" 관점에서는 진흥의 대상, 데이터 등 주요 자산 확보가 목적

  정책 목적에 따른 유연한 적용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류가 적절한지?
- 자국 플랫폼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
  - 이용자 관점에서는 자국이던 해외이던 좋은 제품을 선택
  - 국가의 전략 자산, 산업 경쟁력, 혁신 생태계 구축 관점에서의 자국 플랫폼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4

발제4: 전자상거래 플랫폼

- 전자상거래 플랫폼 가치사슬의 변화, 특히 검색 및 선택, 구매에서의 변화

자료: https://www.techi.com/openai-chatgpt-personalized-shopping-feature-ad-free/

- 네이버, 구글 등 검색 기반 쇼핑에 위협 →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지각 변화
- 생성형 AI + shopping 환경을 고려한 정책 방향

5

토론 4

토론문

정건영 디지털플랫폼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토론 5

토론문

전혜선 이용자정책총괄과장 (방송통신위원회)

memo

memo

memo

「플랫폼 시대의 법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

주 최 사단법인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Korea Data Law and Policy Society

후 원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Center for Technology Law and Policy, Korea University

K-internet 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